정기국회 대비 정치권과 현안 협력 강화

도, 국회의원들과 정책 간담회 갖고 도정 현안 반영 노력

24~28일 도정 주요일정 발표… 미래성장 사업 발굴 속도

전북특별자치도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가예산 확보와 공공기관 이전, 국립의전원 설립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국회 협력을 강화하고 대규모 미래성장 사업 발굴에도 속도를 낸다.

이철규 전북자치도 대변인(사진)은 지난 21일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24~28일 전북자치도의 주요 도정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의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특별자치도 시·도 행정협의회를 통해 도정 현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24일 오전 9시 도청 실·국과 출연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 간부회의를 시작으로 한 주간 도정 일정에 들어간다.

오전 10시에는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이 열린다. 전북도는 AI 등을 활용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가운데 5건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이어 이날부터 28일까지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는 제52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가 개최된다. 전국 314개 팀, 7,000여 명이 참가하는 전국 단위 행사로 전북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전북의 산업 경쟁력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후 3시 30분에는 장수군 장수읍 소재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생물안전동 개소식이 열린다. 전북도는 75억원을 투입해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을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가축전염병 등 생물안전 분야의 연구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25일 오전 11시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기록물 전시회가 옛 관사인 하얀 양옥집에서 열린다. '축제, 기록으로 남기다'를 주제로 도내 축제와 관련된 기록물을 전시하며, 이후 도청 로비에서도 전시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후 3시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 식품기업 간담회가 열린다. 경제부지사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창업센터와 입주기업을 찾아 현장을 살펴보고 청년 식품벤처기업의 애로사항과 성장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창업센터는 282억원을 들여 조성됐으며, 청년 식품벤처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20여 개 기업이 입주해 활동하고 있다.

이날 오후 이원택 도지사의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명예지사회장 위촉패 전달식과 새만금개발청의 'K-김산업 글로벌 도약' 관련 정례 브리핑도 진행된다.

26일에는 무주 투자선도지구 내 현대로템 관련 사업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기 위한 TF가 가동된다.

전북도와 무주군, 현대로템 등이 참여하며 전북도 건설교통과장이 TF 팀장을 맡아 사업 추진 상황을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한 행정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오전 11시에는 국회에서 특별자치도 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가 열린다.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실현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공동선언문도 발표할 예정이다.

오후 2시 30분에는 전북대학교에서 '특별자치도 대도약 결의대회'가 개최된다. '피지컬 AI 수도 전북의 미래'를 주제로 이광영 전 KAIST 총장의 특별강연이 진행되며, 참석자들이 공동결의문을 채택한다.

27일 오전 8시에는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 간 정책 간담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예산 확보를 비롯해 공공기관 이전과 국립의전원 설립 등 지역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국회와 전북도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오후 3시에는 치명자산 평화의전당에서 '희망 2026 나눔 유공자 시상식'이 열린다. 고정삼 경제부지사와 김희수 전북도의회 의장이 참석해 나눔과 사회공헌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한다.

28일에는 민선9기 재생 에너지 대전환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이어 오후 2시에는 '전북 메가 프로젝트 발굴 추진단' 킥오프 행사가 개최된다. 전북도는 3,000억원 이상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을 10건 이상 발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추진단에는 도내에서 성장한 기업인들도 참여해 지역 산업 현장과 연계된 실질적인 대형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전북형 이민 비자 구축을 위한 논의도 추진된다. 전북도는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 졸업 후 도내 취업으로 이어지고 장기체류가 가능하도록 단계적인 '비자 사다리'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도 추진된다. 지난해보다 사업비를 크게 확대했지만 산주 동의가 사업 추진의 주요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전북도는 8월 중 산주 동의를 최대한 확보하고 오는 12월까지 방제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주에는 주요 행사도 이어진다. 전북도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기념 콘서트를 통해 14개 시·군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장애인체육대회 전북선수단 결단식도 개최한다.

전북 선수단은 오는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제주에서 열리는 장애인체육대회에 31개 종목, 914명의 선수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군산에서는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개막식도 열린다. 구 군산세관 공간을 활용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알리는 행사가 진행된다.

전북도는 국가예산 확보와 미래성장 사업 발굴, 투자유치, 특별자치도 완성 등 주요 현안을 날짜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열린 도정을 통해 도민들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지난 21일 전북경찰청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김관영 전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겠다"

'이 대통령과 무소속 출마 사전 교감 있었다' 발언 관련

김관영 전 지사,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 경찰 조사 받아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가 지난 6·3 지방선거 무소속 전북도지사 출마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김 전 도지사를 전북경찰청으로 불러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조사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5월 20일 전북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소속 출마의 불가피성에 대해 대통령께 말씀드린 적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은 김 후보와 통화한 적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당시 경쟁 후보였던 이원택 후보 측은 김 전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경찰은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경까지 1시간 30분 동안 김 전 지사를 조사했으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의회사무처

의정지원 역량강화 교육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희수)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의정 운영 전반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을지훈련 기간을 활용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6급 이하 일반직 지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제13대 의회의 의정 운영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직무 역량 교육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세부적으로, 18일 첫날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5분 자유발언 및 연설문 작성법을 교육했으며, 둘째 날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질의 및 자유발언, 셋째 날의 경우 예·결산 분석기법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마지막 날에는 국무국외출장 절차 및 위반 사례 교육으로 펼쳐졌다.

특히 교육은 단순한 이론 강의에 그치지 않고 의회 직원들이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도록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형 과정으로 진행됐다. 전문 강사들의 현장 경험과 의정 지원 노하우를 배우는 기회였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의정 운영 전반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정읍시의회, 의회소통팀 신설

정읍시의회(의장 이복형)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보다 가까이에서 경청하고 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과 안내를 위해 '의회소통팀'을 신설해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조직 개편은 의회를 찾는 시민들의 민원과 건의사항이 다양해짐에 따라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민원 상담 창구를 일원화하고, 민원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의회소통팀은 의회 방문 민원을 비롯해 전화, 우편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되는 시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민원 내용을 확인해 의회와 정읍시 및 관계기관에 적절한 처리 방향을 안내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의회 방문과 관련한 사항은 정읍시의회 의회소통팀(063-539-6029)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서비스·아이디어 침해도 제대로 배상받는다

민주 김의겸 의원, '부정 경쟁 방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서비스와 아이디어, 데이터 등의 무단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의 손해배상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나섰다.

김의겸 의원은 지난 21일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여러 기준을 두고 있지만,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추정하는 규정이 '물건의 양도'를 중심으로 마련돼 있어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등 서비스 산업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기업의 주요 자산이 제품이나 영업비밀을 넘어 사업 아이디어와 데이터, 성명·초상 등 인적 식별표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현행 손해배상 제도는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우선 손해액 추정 규정의 적용 대상을 기존 '물건의 양도'에서 '물건의 양도 또는 서비스의 제공'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침해자가 제공한 서비스의 수량과 피해자가 제공할 수 있었던 서비스의 수량 등을 토대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침해가 없었다면 권리자가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사용대가를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넓혔다. 기존 상표 등 표지와 영업비밀뿐 아니라 거래 과정에서 제공된 기술적·영업상 아이디어, 데이터, 성명·초상 등 인적 식별표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의 무단 사용도 손해액 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사용대가 상당액의 산정 기준도 현행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정비했다. 이를 통해 거래 선례가 충분하지 않은 신규 아이디어나 초기 기술의 가치도 보다 현실적으로 손해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품 판매뿐 아니라 서비스와 데이터, 아이디어의 가치가 커지고 있는 산업 현실에 맞춰 부정경쟁행위 피해자의 구제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의겸 의원은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제품뿐 아니라 서비스와 데이터, 아이디어 자체가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 됐지만 손해배상 제도는 여전히 물건 거래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며 "좋은 아이디어와 성과를 빼앗기고도 손해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구제 제도를 산업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폭증한 건강보험 심판청구

신속한 권리구제 길 열린다

민주 박지원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급증하는 건강보험 관련 심판청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실제 기능에 맞게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정원을 현행 60명 이내에서 90명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해 국민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조정'이라는 명칭 때문에 당사자 간 화해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조정기구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심판청구 건수가 크게 늘면서 신속한 심판을 위한 인력 확대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 심판청구는 2013년 약 2만 건에서 2025년 6만여 건으로 10여 년 사이 3배가량 증가했다. 반면 위원 정원은 2014년 법 개정 이후 60명 이내로 유지되고 있어 급증한 업무량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위원회의 명칭을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변경해 기능과 명칭을 일치시키고, 위원 정원을 90명 이내로 늘려 심판청구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박지원 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이의가 있어 권리구제를 요청한 국민이 심판 결정을 마냥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제때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권칠승·문진석·박용갑·박희승·서미화·서영석·소병훈·염태영·윤준병·이수진·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만호기자

고창군-민주당 지역위, 정책협의회 개최

전력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주요 현안 논의

고창군과 더불어민주당 고창지역위원회가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 21일 오후 고창군청 제2회의실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윤준병 국회의원, 박성만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김정강 도의원,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군정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민선8기 주요 성과들을 공유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성과로는 △삼성전자 고창물류센터 착공 △1조 6,900억원 규모 민간투자 유치(19개 기업 △세계유산도시 브랜딩으로 1천만 관광객 유치 △서해안 체류형 관광거점 조성 △전국을 선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역대 최대 국가예산 확보 등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군정 주요사업 49건(현안 21, 국비 28)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2027년도 국가예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고창군의 핵심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선9기 핵심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선도도시 지정 △고창 전력산업 클러스터 구축 △고창 제2일반산업단지 추가 조성 △서해안철도 예타 반영 △역사·문화를 연결한 전국 최고 수학여행 관광지 구축 등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